5·18 암매장 실체 밝힐 '진실의 문' 열렸다

조사위, 유가족 채혈 지속 진행
옛 광주교도소 주변 발굴 유골 중
40구째 조사서 DNA 일치 확인
120여구 남아 추가 발견 기대

1980년 5월 전후로 행방이 묘연해진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찾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와 행방불명자 유가족 유전자의 대조작업 중 1구가 일치한 것에 따른 것이다.

25일 국회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5·18사적지 제22호인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 총 262구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1구의 DNA가 유가족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5·18진상조사위는 암매장 추정 사건 발굴 과정에서 확보한 유해와 행불자 유가족 유전자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관계당국에 '행방불명 보상신청' 한 242건(중복 신청 포함) 가운데 85명만 행불자로 인정됐다. 이중 중복 신청을 제외하면 98명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하다.

이에 5·18진상조사위는 행불자 유가족에 대한 채혈 자료를 전남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넘겨받고, 추가로 유가족 채혈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인정자 중 미채혈자 가족에 대한 연락처를 추적해 채혈을 권유하고, 불인정자 가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은 가족을 선정해 유전자 채취를 유도해 온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197가족 377명의 채혈을 완료 했다.

지난 2019년 12월 옛 광주교도소에서 무연고자 묘지에서 신원미상의 유골 수십 여구가 뒤섞인 상태로 발견됐다.

2020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신원미상의 유골에 대한 분류 작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61명의 유골로 분류했다. 이외에도 2020년 4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솔로몬파크 공사현장에서 유해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총 262구 중 DNA 채취 가능한 유골은 160여 구로 알려졌다. 모든 유골에서 채취를 할 수 없던 것은 40여 년이 지나 부패가 많이 진행됐고, DNA검출의 난도가 높은 것이 그 이유다.

이중 40여 구째를 조사하던 중 행불자 가족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골이 나온 것이다. 나머지 120여 구가 남았다는 점에서 추가 행불자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판단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본대대장 김모 소령이 1995년 검찰 조사에서 옛 광주교도소에 '12구를 가매장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점도 추가 행불자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히고 있다. 그는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이동하는 호송하는 과정에 사망한 3명을 포함해 광주교도소에 있는 동안 12구의 시체를, 사병 5~6명과 함께 가마니로 2구씩 덮어 가매장한 일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소령 이외에도 50명이 넘는 신군부 관계자가 옛 광주교도소에서의 가매장 실행·매장 목격·지시 등을 진술해 왔다.

이외에도 5·18진상조사위는 1981년 황룡강 일대에서 발견된 무연고 분묘(현재 영락공원에 임시 매장)의 유해 12구를 발굴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5·18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5·18진상조사위는 이들 유해에서 확보한 시료 295건과 유가족 유전자 대조 작업의 모든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이번 유전자 일치는 행불자 유해와 일치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5·18당시 살해장소, 가매장 또는 암매장의 장소 등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조사단계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 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국힘 '운명의 한 주'…새 비대위 가처분 심리

법원 불인용땐 또다시 대혼돈
이준석 추가징계 심의도 열려

국민의힘이 이번주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앞두고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섰다.

오는 28일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와, 당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가 동시에 열린다.

두 사안 모두 결과가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지는 만큼, 이번 주는 국민의힘에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정진석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시즌2'를 띄운 만큼,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는 지난 1차 비대위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은 다시 대혼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3차 비대위'를 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대신 최근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원톱'으로 정기국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른바 '플랜B'가 가동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주호영 원톱' 체제 상황이 된다면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시기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가처분 리스크'를 떨쳐내고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도 뇌관으로 꼽힌다.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연합뉴스

정부, 역대 최대 쌀 45만t 매입…쌀값 폭락세 멈출까

당정, 쌀값 안정 위해 시장 격리
민주, 양곡법개정 근본대책 촉구

정부가 수확을 앞두고 폭락하는 쌀값 안정을 올해 햅쌀과 창고에 남아있는 지난해 남아있는 쌀 45만 t 을 사들이기로 했다. 역대 최대 폭으로 추락하던 쌀값 폭락세가 멈출 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매입 결정에 대해서는 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임시 방편적 방인이 아니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 안정 조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제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5만 t 의 쌀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이뤄진 10차례의 수확기 격리 물량 중 최대 규모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지 쌀값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228원에 비해 24.9% 떨어지는 등 지난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한 상태로,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농림부 판단이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올해 수확한 쌀과 지난해 수확해 창고에 보관중인 쌀까지 포함해 45만 t 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확기 햅쌀과 구곡을 함께 매입한 지난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특히 올해 쌀 초과 생산량과 구곡 재고량에 더해 10만 t 을 추가로 격리키로 했다.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약 25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올해 말까지 창고에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고쌀 10만 t 을 추가로 사들이는 것만으로는 폭락세인 쌀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의 매입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올해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 콩, 밀, 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농민들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당장의 시장 격리 조치 뿐 아니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 시장 안정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미흡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식 시장 격리 조치 외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쌀값이 추가적으로 폭락하면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은 더욱 빠르게 붕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